



光州日報

제1796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1월 24일 (음력 12월 17일) 목요일



설 '배송 전쟁' 시작

설을 2주일 기량 앞두고 유통·택배 업계의 '배송 전쟁'이 시작됐다. 23일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우편집중국에 택배물량이 몰려들면서 직원들의 손놀림도 분주해졌다.

/위작기자 jrwi@kwangju.co.kr

새 정부 '호남 민심' 심상찮다

수도권 위주 정책 균형 발전 역행

문화수도·여수엑스포 차질 우려

한 달 뒤 출범할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는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정사진을 만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동안 수도권에 치중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 지역의 미래와 국가균형 발전을 견인할 지방 정책은 외연에 따라 경제적 낙후를 벗어나지 못한 호남의 미래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여기에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실용'의 명분 아래 호남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우선 인수위가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광주·전남지역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수엑스포 지원 및 광양항 개발 등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지난 21일에는 인수위 모 전문위원이 '부산항원-포트 개발'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농촌진흥청의 폐지도 한미 FTA로 농산물 개방을 앞둔 전남지역 농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정부위원회 정리 대상에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가 포함되면서 이명박 정부가 기존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첨단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등 인수위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지지부진한 수도권 기업의 광주·전남지역 이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무안 기업도시 조성 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대학입시 자율화와 수도권에 중점을 둔 문로-스쿨(법학대학원) 정원조정은 지역 대학가에도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부익부 빙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문화수도조성위·추진단 폐지 법안 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 폐지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지난 21일 조성위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23일 추진단에 따르면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로 130명의 한나라당 의원

들이 조성위 및 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별법 제29조 조성사업 심의·의결 기구인 조성위와 제30조 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삭제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

합계획 수립과 정부와 지역 간 가교 역할,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및 갈등 조정 등을 추진할 조성위와 추진단이 폐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추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문광부 소속 기구이기 때문에 특별법에서는 명칭이 삭제되지만 기구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경제자유구역에 '자유' 없고 다도해국립공원 '주민' 없다

'전봇대' 같은 황당한 규제 많아

“과도한 규제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는 ‘자유’가 없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는 ‘주민’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황당한 규제 사례로 지적한 ‘대불 산단 전봇대’가 뽑히면서, 전남 경제와 관광을 이끌어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과도한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투자 꺼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지장 이후 지난해 말까지 10개 외국인 기업 25억8천달러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는데 그치고 있다. 복잡한 규제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여수화양 지구 골프장 건설허가에 2년을 걸었는가 하면, 하가 관청서 광양항에 66만㎡의 조선소를 유치하는데 배 두척이 동시에 들어올 경우를 가상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구했다. 복잡한 부산항에서도 요구하지 않은 자료를 항만시설이 남아도는 광양항에서 달라고 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내의 자유무역지구에 대한 건축허가를 관할 장관이 따로 하도록 해 줄는 입주업체의 불편도 크다. 율촌산단내 자유구역은 무려 117km나 떨어져 있는 산자부 산하 마산관리원까지 거리를 허가를 맡아야 하고, 광양항내 자유구역은 35km 거리에 있는 여수 지방해양항만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법인세·소득세 감면도 경제자유구역은 3년간 100%·다음 2년 50%인데, 외국인투자지역은 5년간 100%·다음 2년 50%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오히려 불리하다.

지난 1981년 신안군 등 도내 5개 시·군 17개 읍면 2천321.51㎢에 지정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전국 해상국립공원은 69.3%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공원지점 이후 ‘자연공원법’의 과도한 규제에 시달

리면서, 인구가 68%나 감소했다. 특히 고흥군 봉래면은 79.8%의 인구 감소율을 보였다.

건물 80%가 불법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홍도에 있는 모텔 11곳 가운데 10곳이 무허가일 정도로 주민들의 삶을 짖어내고 있다”고 보고했을 정도다. 홍도는 각종 인허가 규제로 숙박시설 71곳 중 78%가 불법이고, 엄격히 적용한다면 150여 가구 전체가 고발 대상이다.

완도군 보길면 보록리 뒷산의 동백나무 숲은 무성한 흙덩굴 때문에 죽어가고 있지만, 주민들은 지켜보고만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원지구니까 그대로 뛰어야 한다고 제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중앙 부처에 수차례 개선을 건의했지만 관련 부처들이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증시 불안한 진정세

정부 “국민연금 9조 투자 조기 집행”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기금금리 인하와 정부의 대응책 발표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가 일단 진정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정부는 증시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국민연금 9조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증시안정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기사 11면〉

2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9.30포인트(1.21%) 상승한 1,628.42로, 코스닥지수는 5.18포인트(0.84%) 오른 619.98로 마감하면서 이틀간의 급락세를 멈췄다.

전날 폭락했던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반등에 성공했다. 유럽과 미국 증시도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세로 반전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불안한’ 진정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전 주식형펀드 환매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산 운용사에 대해 자금지원에 나서는 한편, 주가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기

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연금은 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국내 주식에만 최대 22조원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Scrub Crush Ice

LANEIGE